전남광주시, 통합 재정운용 밑그림…재정 확충·지출 정비

TF 가동…4개 과제 추진방안 연내 마련
균형발전기금 1천억 조성…취약지 집중
유사·성과 부진 사업 정리…채무도 관리



백승주 전남광주통합특별시 균형발전부시장이 5일 무안청사 기자실에서 '재정혁신 TF 추진경과 및 중점 추진 과제' 관련 기자간담회를 하고 있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 제공〉

전남광주통합특별시가 시·군·구 재정 확충과 기존 사업의 지출 구조조정을 양축으로 통합 이후 재정 운용체계 정비에 나선다.

5일 전남광주시에 따르면 전담조직인 '재정혁신 TF'를 가동하고,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용 등을 포함한 4개 핵심과제의 세부 추진방안을 연내 마련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전남광주시는 지난 4일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 주재로 '재정혁신 TF 안건 공유회'를 열고 재정 전략·균형 발전·재원 확충 등 3개 분야에서 선정한 12개 추진과제의 실행방안을 논의했다.

이 가운데 ▲시·군·구 재정 확충 및 특화발전 재정 지원 ▲통합지방정부지원금 운용 종합계획 수립 ▲지출 구조조정 및 지방채 관리 ▲균형발전기금 조성 등 4개 과제를 우선 추진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에는 균형발전기금 1천억원을 우선 조성해 전남광주시 내 취약·소외지역에 집중 투자할 예정이다. 돌봄·교육·문화·교통 등 지역별로 필요한 분야를 중심으로 지원하되, 구체적인 투자 대상과 규모는 추가 검토를 거쳐 정할 방침이다.

초기 재원은 통합지방정부지원금에서 기금 간 전출을 통해 마련하고, 중장기적으로는 일반회계 또는 특정 세입과 연계해 안정적인 재원을 확보하는 방안을 모색한다. 내년 1월부터 기금을 조성·운영하는 것이 목표다.

시·군·구 재정 확충 방안도 마련한다. 각 지역의 재정 수요와 특성을 고려해 지원 규모와 방식을 논의하고, 통합에 따른 추가 재원이 지역 균형발전으로 이어질 수 있도록 재정 지원 체계를 정비한다.

정부가 제시한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통합지방정부지원금 활용 방안도 주요 과제다. 관련 기금 설치 근거를 담은 특별법이 국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전남광주시는 시민과 시의회 의견 수렴 등을 거쳐 내년 1월 하순 추가경정예산을 통해 기금운용계획을 확정한다는 구상이다.

재정 건전성 확보를 위한 지출 구조조정도 병행한다. 기존 전남도와 광주시가 유사하게 추진해 온 사업을 비롯해 관행적인 행사성 사업과 성과가 부진한 사업을 정비하고 필요하면 사업 폐지나 예산 삭감, 사업 방식 변경 등을 검토할 계획이다.

이는 지난해 말 기준 전남·광주 합산 채무가 3조6천억원을 넘는 등 기존 지방채 부담을 고려한 조치다. 전남광주시는 추가 재원 확보와 함께 중장기적인 채무 관리에도 나선다.

TF는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이 단장,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이 부단장을 맡고 관련 부서 공무원과 연구기관·민간 전문가 등이 참여한다. 앞으로 과제별 분과를 구성하고 추진 상황을 지속 점검한다.

전남광주시는 단기 핵심과제의 추진 결과를 내년 1월과 4월 추가경정예산 편성 과정에 반영하고, 필요한 경우 관련 조례도 손질한다.

백승주 균형발전부시장은 "지역 발전을 위한 적극적인 재정 투자와 중장기적인 재정 건전성 유지는 상충되지 않는다"며 "성장 잠재력 확충과 지역 간 균형발전을 함께 추진하면서 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분야에 재정 투자가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최명진 기자

"20조 통합지원금 배분 기준 마련 시급"

기획재정위원회 행감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 구체화 필요
2031년 지원 종료 재정 공백 우려
필수·공공의료 확충·지원 명시 등도


박필순


최선국

정부가 전남광주통합특별시에 4년간 최대 20조원 규모의 재정 지원을 약속한 가운데 지원금의 구체적인 배분 기준과 중장기 재정 운용계획을 조속히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특히 통합지원금이 종료되는 2031년 이후 재정 공백에 대비한 대책 마련도 주요 과제로 다뤄졌다.

전남광주통합특별시의회 기획재정위원회는 5일 재정기획본부를 대상으로 한 행정사무감사에서 통합지원금의 배분 체계와 재정 운용 방향을 점검하고 지원 종료 이후 재정건전성 확보를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을 주문했다.

박필순 의원(더불어민주당·광산3)은 "통합지원금 5조원 가운데 일반지원계정은 2조8천500억원이고 반도체 지원에 1조5천억원, 사무이양 비용에 6천500억원이 배정돼 있다"며 "43%에 해당하는 재원이 특정 용도로 지정된 상황에서 나머지 57%만으로 지역의 다양한 요구를 수용할 수 있겠느냐"고 지적했다.

이어 "반도체 지원금도 지역에 대한 혜택으로 볼 수 있지만 정부 차원의 메가 프로젝트 추진 과정에서 발생하는 예산이기도 하다"며 "지역의 다양한 재정 수요를 충족할 수 있도록 개선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통합지원금 배분을 위한 구체적인 절차와 심의기구가 마련되지 않은 점도 도마 위에 올랐다.

박 의원은 "배분 과정을 위한 태스크포스(TF)가 있는지,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나 의견수렴기구가 있느냐"며 "지역 간 갈등을 최소화하려면 의회와 시·군·구가 충분히 협력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춰야 한다"고 말했다.

이에 전한성 재정기획본부장은 "특별법 개정을 통해 기금 설치 근거를 마련하고 관련 조례를 제정해야 한다"며 "현재 조례안을 검토 중이며 심의위원회의 설치 여부와 기능, 범위 등을 살펴보고 있다"고 밝혔다.

또 박 의원은 미래대응기금 신설에 따른 지방교부세 감소 가능성을 지적하며 재정특례 발굴과 정부를 상대로 적극적인 대책 마련도 요청했다.

특히 "2030년 이후에는 통합지원금 지원이 보장되지 않은 상황에서 복지 수준 상향 평준화에 따른 재정 부담 증가에 대비해야 한다"며 "통합지원금이 포함된 2027-2031년 중기지방재정계획에 지원 종료 이후의 대응 전략까지 담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최선국 의원(민주당·목포1)은 통합지원금의 사용 용도에 의료취약지 지원을 명시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최 의원은 "의료취약지의 필수·공공의료 기반 확충 및 운영 지원이라는 항목이 반드시 들어가야 한다"며 "통합의 효과가 전남광주 구석구석에 스며들 수 있도록 의료 지원의 근거를 명확히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교육청 법정전출금 미교부 문제에 대해선 "매년 지급해야 할 돈을 지급하지 못하는 상황은 특수공시 대상에 해당한다고 본다"며 "왜 전출하지 못했는지, 어떤 사정이 있었는지를 재정공시에 반영해 책임성을 높여야 한다"고 주문했다. /변은진 기자

광주도시철도 2호선 1단계 '안전 개통' 협력 강화

전남광주통합특별시 도시철도건설본부와 광주교통공사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의 2028년 12월 안전한 개통과 원활한 운영 준비를 위해 지난 4일 '개통준비 공동실무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

개통준비 공동실무협의체는 도시철도 2호선 1단계 구조물 준공을 앞두고 도시철도건설본부와 운영기관인 광주교통공사 간 실무 협력체계를 강화하기 위한 협의기구다.

이날 회의에서는 양 기관의 분야별 담당자 등 31명이 참석해 차량기지 인수인계 및 운영 준비 등 주요 현안을 논의했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교통공사와 시설물 시공 단계부터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미리 협의해 재시공을 방지할 방침이다. 또 차량기지 인수인계와 공사 인원 배치 등 세부적인 운영 준비 사항도 교통공사와 긴밀히 조율해 나갈 계획이다.

건설본부·교통공사, 첫 실무회의
2028년 말 개통…매월 현안 점검

광주교통공사는 운영 준비에 필요한 설계 변경 및 개보수 현황, 분야별 최종 도면 제공 등 세부적인 정보 공유를 요청했다.

아울러 건설본부가 주최하는 주요 회의에 교통공사 담당자가 참석해 실무 정보를 공유하고 협의를 원활하게 이어갈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했다.

양 기관은 매월 분야별 회의를 개최하고 논의 결과를 공유하는 동시에 분야 간 간섭 사항이나 기관 간 조율이 필요한 사안이 발생하면 필요에 따라 통합 회의를 개최해 신속하게 해결 방안을 마련할 방침이다.

도시철도건설본부는 이번 협의체 운영을 통해 운영기관의 의견을 건설 과정에 적극 반영하고 잠재적 문제점을 사전에 발굴·조치해 향후 철도종합시험 운행과 시설물 인수인계가 차질 없이 진행될 수 있도록 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박금화 도시철도건설본부장은 "도시철도 2호선의 성공 개통을 위해서는 건설 단계부터 운영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분야별 실무협의를 통해 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검토하고 시민에게 안전하고 편리한 도시철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변은진 기자

광주광역시교통문화연수원
광주매일신문 배려 교통문화 실천운동 캠페인
광주교통문화연수원이
"대·자·보" 도시 광주 실현을 위해 앞장서겠습니다
■ 사업용 운전자(택시, 버스, 화물 등) 법정교육으로 대·자·보 시행을 위한 교통 문화 정착
■ 어린이교통공원(어린이집, 유치원, 초등학생 등)에서는 유년 시절부터 "대·자·보" 교통안전 체험교육 강화
■ 고령화 시대를 대비한 찾아가는 어르신교육으로 대자보 교통안전 의식 전환 운동
■ TBN 교통방송과 함께하는 대자보 인문학 강의
■ 광주기후에너지진흥원과 협업을 통한 미래 기후 교통 환경 대응 역량 강화
■ 학생(초·중·고) 교통안전교육을 통한 안전한 자전거·킥보드 문화 정착


교통안전캠페인

운수 종사자 교육

어르신 교육

학생 교육

어린이 교육